

동향과 분석

» 통일외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이석)	3
» 남북한 유형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이재호)	26
» 한미동맹과 북한의 대응 (조남훈)	44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이 석 (KDI 연구위원)

suklee@kdi.re.kr

I. 머리말¹⁾

이 글의 목적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이란 남북한의 전면적 경제적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토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학적 개념을 빌어 이를 논의하거나, 통일 후 한반도 전체의 경제상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이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적) 통일이 부여하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통합론에서 상정하는 통합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으로는 통일 이후의 전체 한반도 경제상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일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의 과정이나 최종 결과물의 형태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를 통일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일반적인 경제학적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 글에서는 통일이 한국경제에 부과하는 경제적 문제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상호

1) 이 글은 필자가 2010년 2월 19일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주최 학술회의(북한 및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합의 조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남북경제통합의 논리적 구조: 개념과 조건들”이란 글을 전면 재편집하여 수정한 것이다.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통일에 따른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일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가능한 경제통합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패러다임은 각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 통일에 의해 외생적으로 부여되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에 통일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통일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발생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발생 스케줄과 영향력 대상,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통일의 경제적 문제가 과연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토론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긍정적 견해를 서로 대비시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남북경협을 검토하고, 그것의 전제조건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무리 없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의 남북경협이라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주체 또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며 또한 한국사회에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II. 통일의 경제적 문제와 경제통합의 패러다임

1. 통일에 따른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징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경제통합이란 자연적이며 경제적인 현상이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능가함으로써 통합에 참여하는 각각의 국가 모두가 이를 실행할만한 경제적 유인을 갖는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통합에 참여하는 각 국가 내부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경제주체 역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 통합이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수준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통합이 특정의 문화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통합의 수준은 높지 않아서, 양 국가의 전면적 경제통합이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치적)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이처럼 자연적이며 경제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남북한이 서로 저울질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나라가 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당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남북한 경제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통합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될 정도로, 서로 이질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경제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한 경제 사이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한다. 첫째, 소득수준의 비대칭성이다. 현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내외의 (準)선진국 경제인 반면, 북한은 1인당 소득 500달러 내외의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비대칭성이다. 현재 한국은 IT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탈공업화 경제인 반면, 북한은 과거의 기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하여 농업 등 일차 산업의 비중이 또다시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경제제도 상의 비대칭성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선진적인 시장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반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한 고립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표 1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추이(1992~2000)

[A. 북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GDP (공식통계, 億 달러)	전체	208.8	209.4	154.2	128.0	105.9			102.7	105.9
	농업	78.1	82.3	64.3	52.2	47.8				
	공업	45.5	46.9	32.2	22.3	15.6				
	건설	13.1	12.6	9.1	8.2	5.1				
	기타	71.6	67.6	48.6	45.3	67.5				
Cf. 한국은행 추정치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1인당 GDP (공식통계, 달러)		-	991	-	-	-	-	-	453	463

[B. 한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GDP (공식통계, 億 달러)	전체	3,298	3,621	4,233	5,173	5,574	5,164	3,461	4,452	5,118
	농업	237	213	206	194	185	166	157	160	151
	광공업	838	841	857	869	838	826	857	878	918
	전기가스수도	65	68	68	62	62	62	71	77	80
	건설	370	376	357	357	373	379	327	283	259
	서비스	1,571	1,584	1,593	1,596	1,627	1,645	1,670	1,679	1,676
1인당 GDP (공식통계, 달러)		7,527	8,177	9,459	11,432	12,197	11,176	7,355	9,438	10,841

출처: DPRK/UNDP (1998), DPRK (2002), 한국은행 통계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비대칭성을 감안하면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적어도 현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앞선 한국이 사실상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1인당 북한 소득격차가 최대 4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통일의 경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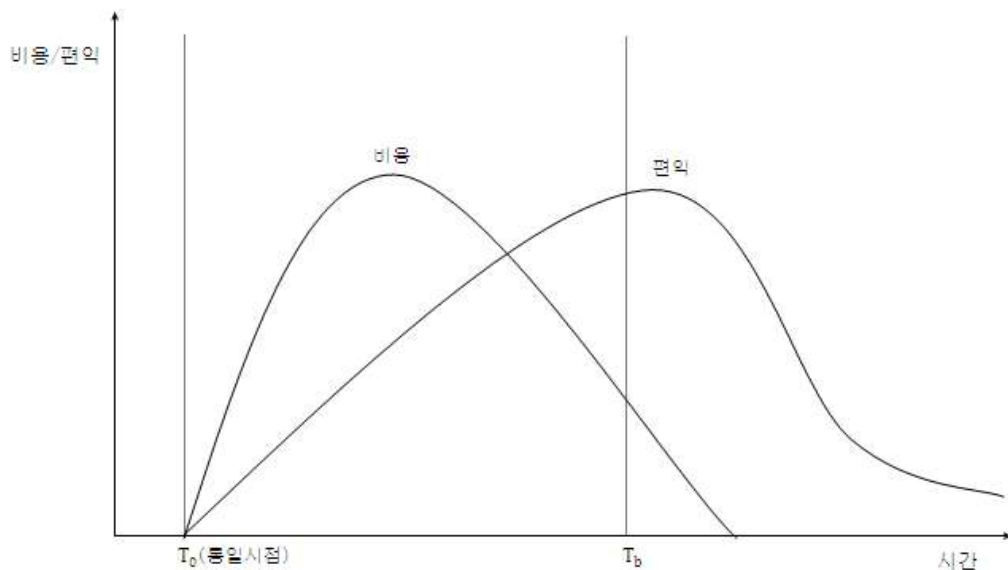
물론 통일에 따른 경제적 통합이 현재의 한국경제에 일방적인 비용지출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비용과 동시에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 역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통일에 따른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나 국방비와 같은 분단비용의 감소, 넓게는 동북아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장기회의 창출 등이 모두 통일로 인한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으로 기대되는 이익들이다. 더욱이 개념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언제나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은 정의상 언젠가는 지출이 중지되는 것인 반면, 통일 편익은 통일이 유지되는 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일비용이란 통일 시점에서의 남북한 격차를 통일 이후 일정 수준 이내로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며, 따라서 그것은 남북한 격차가 해소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지출이 중단되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 한국경제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이란 정의상 남북한의 통일 상태가 유지되는 한 영구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언젠가는 지출이 중단되는 통일비용과 통일 이후 영구히 지속되는 통일의 편익을 서로 비교하면, 언제나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통일의 총편익이 그것의 총비용 보다 언제나 크다고 해도,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여전히 한국경제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의 편익과 비용의 발생 스케줄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통일 시점부터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그에 따른 편익은 이러한 기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초기 한국경제는 막대한 순통일비용의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하는 경우에는, 비록 통일 이후 전 기간에 걸쳐 한국경제가 향유하는 통일 편익이 그것의 비용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통일 시점에서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은 (정치적) 통일시점에서부터 한국경제가 지불하는 통일비용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통일편익의 스케줄을 예시하고 있다. 우선 통일비용은 통일 시점에서부터 급팽창하여 일정 시점에 이르면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것을 계기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최종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0'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통일편익 역시 통일 시점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는 그려져 있으나, 그 크기는 통일 이후 일정 시점까지는 통일비용 보다 낮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물론 통일편익은 통일비용과 달리 일정 시점 이후에도 '0' 으로 감소하지는 않고, 비록 적은 크기이나마 영구히 지속된다. 이에 따라 **그림 1**에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시간에 따라 모두 더하면, 그 결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언제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 이후 특정 시점(T_b)까지는 그간의 누적적인 통일비용의 합계가 그것의 편익의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점까지는 통일이 한국경제에 부(-)의 순편익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통일은 한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림 1 통일비용 및 편익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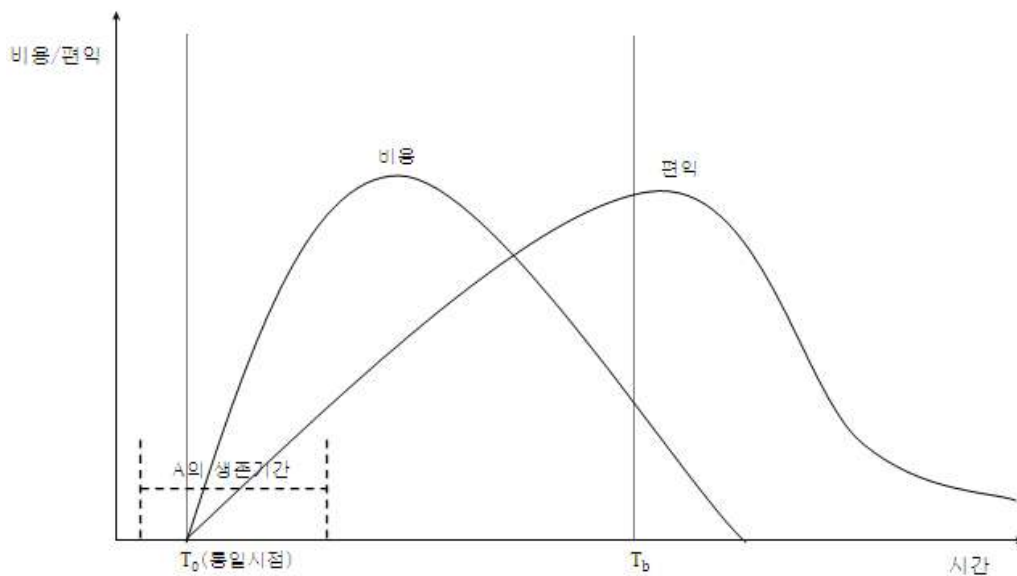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 2**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 부근에서 한국경제에 생존하는 특정 세대(generation)의 시민 A를 생각하고 있다. A는 통일이 실현되는 시점에 생존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통일에 따른 누적적 편익이 그것의 비용을 초과하는 시점 T_b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A에게

는 통일이 경제적으로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A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통일비용이 언제나 편익을 초과함으로써, 그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A의 존재는 통일로 인해 한국경제가 매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A는 통일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것이다. A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을 능가하고, 특히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 이는 통일 이후 한국경제 전체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IMF 위기사태를 경험한 기본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경제 자체의 전망과 체력이 불투명해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보유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일 통일 이후 한국경제에 이러한 유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비록 A가 매우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통일은 한국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 그림 2 | 통일비용/편익 스케줄과 통일 세대의 문제



또한 A는 통일이 한국경제의 재정능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것이다. A가 바라보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한국경제 구성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통일의 비용 대부분은 그 속성상 한국정부가 재정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통일 이후 비록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재정상태는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문제는 A가 이러한 재정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A는 이 문제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A는 통일로 인해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는 미래 세대, 다시 말해 시점 T_0 이후의 세대가 갖는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끌어와 대응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응당 이러한 유혹은 A와 A의 미래 세대 사이에 통일비용의 지출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일종의 경제적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A는 이제 통일비용 및 편익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한국정부를 예전과 같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통일 이전의 한국정부는 A가 선출한 것이며, 따라서 그 정부는 좋은 싫든 A의 선호만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한국정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제 한국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정부로서 A는 물론 그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북한주민들의 선호 역시 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존재이지만, 북한주민은 이러한 통일비용의 지출대상으로 이를 향유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만일 이제 한반도 정부가 자신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선호마저 반영하여 통일비용의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면, A는 그것이 언제나 자신의 선호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처럼 A는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통일이 한국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A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당 A는 통일에 반대하려는 유인을 더욱 많이 가질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A가 바로 통일을 주도해야만 하는 통일 세대라는 점이다. 이는 통일의 경제적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통일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통일비용이 통일편익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지칭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보면, 오히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을 언제나 능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문제는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기간별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통일세대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 그 결과 이들 통일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매

우 역설적으로 한국의 통일세대가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통일 과정 자체가 무산되거나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3. 통일에 따른 경제통합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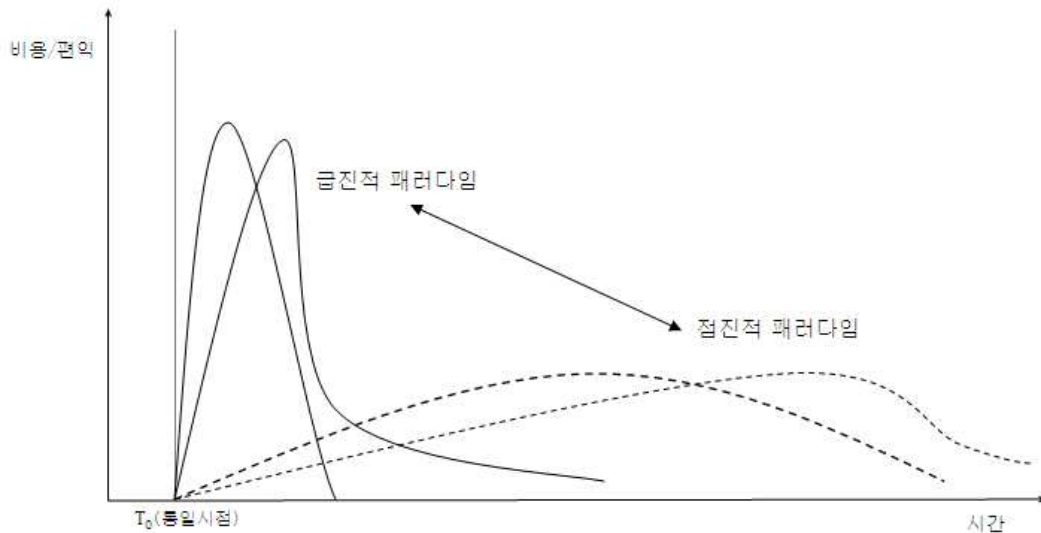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서와 같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와 관련 **그림 3**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급진적 통합 패러다임으로서, 이는 통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북한 지역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최단시간 안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현재의 한국사회 수준과 유사한, 또는 그를 능가하는 교육/훈련/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역시 구축함으로써 단시간 안에 북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한국과 유사하거나 동등하게 상승시키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급진적 패러다임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매력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 정부의 국민으로 포함된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이에 동조할 것이며, 또한 이들로 하여금 통일의 혜택을 가장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길 역시 바로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앞서 언급한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급진적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통일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이들 세대는 통일 자체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림 3**은 통일 이후의 급진적 통합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되는 점진적 패러다임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양자의 통합에 필요한 비용(편익)을 상당 기간 분리 지출(향유)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을 한국의 일정한 경제특구로 지정한 다음, 여기에 맞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복지 혜택, 그리고 노동력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발생 스케줄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된다는 점에서, 비록 앞서와 같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데에는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패러다임에는 한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정치적 통일이라는 상황과 개념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정부가 건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를 맞아 한국이 사실상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한국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정부가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그대로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이로 인해 돌발적인 한국의 북한흡수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경우 이미 통일한국의 주민이 된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 이후 장기간 자신들이 이등 시민' 처럼 취급되는 일을 용인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만일 이러한 북한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통일한국의 정부 자체가 유지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림 3 ■ 남북경제통합 패러다임의 비교



4. 통일에 따른 남북경제통합의 딜레마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학적 통합논의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만 보면 남북한 경제는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질적이다. 둘째, 그러나 남북한은 정치적 통일을 당위론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통일이 성사될 경우 양자의 경제적 통합 또한 매우 당연하게 추진될 것이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요인으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은 한국경제에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충격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기간별, 영향 대상별, 이해 관계자별 불일치로부터 연유하는 것들이다. 넷째,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통일은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히며, 그 결과 이들 통일 세대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만드는 역설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다섯째,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통일 이후라도 남북한의 실질적 경제통합을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경제통합 패러다임은 일단 정치적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섯째, 따라서 일단 정치적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는 급진적 패러다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패러다임은 앞서 언급한 한국의 통일 세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정하고 있는 정치적 통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III.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보는 두 시각

우리는 이제까지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해 전체 통일과정 자체에 기본적 딜레마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 또는 영향을 갖고 있을까? 현재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긍정적 시각

우선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기간별 불일치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적 이질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보완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지출에 상응하는 편익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통합은 한국경제에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인구학적 편익 및 노동력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볼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대규모의 해외노동력이 유입되고 있고, 장래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부족과 경제 활력의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력의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해외인구 유입과 국내자본의 해외진출로 어느 정도 상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동질적 사회에 유입되는 대규모 해외노동력은 이를 사회적으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지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자본의 급격한 해외진출 역시 그에 상응하는 한국경제의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통일 이후 남북한의 전면적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인구가 새롭게 한국경제에 편입되는 경우, 그에 따른 편익은 매우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인구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일에 따른 한국의 비용지출이 늘어날수록 정확히 그에 상응하여 한국경제에 편입되는 북한의 노동력 역시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통한 편익의 증대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한국과 상당히 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은 과거 기초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를 운영하던 일종의 과잉 공업화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제조업에 맞추어 전체 노동력을 교육하고 관리하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시작될 경우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비용을 북한을 매개로 중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토대로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통일로 인해 북한경제를 통합시키는 비용은 예상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은 바로 새로운 시장질서에 맞게 기존의 경제행위를 재편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경제주체를 재교육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일상적 경제생활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시장질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남북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의 (한국)시장경제로의 전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그렇게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표 2 남북한의 주요 인구 데이터

A. 남북한 인구규모 비교(1992~2000)

(단위: 백만 명)

		1993	1996	1999	2000	2002	cf. 1946
북한	총인구	22.21	22.11	22.75	22.96	23.31	9.26
	남성	9.68	10.78	-	-	11.37	4.63
	여성	10.85	11.33	-	-	11.94	4.63
한국	총인구	44.19	45.52	46.61	47	47.64	19.36
	남성	22.24	22.92	23.45	23.66	23.98	-
	여성	21.95	22.6	23.15	23.34	23.65	-

B. 남북한의 사망률, 출생률 및 인구 자연 증가율 비교(1980~2002)

(단위: 천명 당)

		1980	1990	1993	1996	1998	1999	2000	2002
북한	조출생률	21.8	22	20	20.1	18.2	17.8	17.5	16.22
	조사망률	4.5	5.9	5.5	6.8	9.3	8.9	8.8	9.07
	인구자연증가율	17.3	16.1	14.5	13.3	8.9	8.9	8.7	7.15
한국	조출생률	22.7	15.4	16.4	15.3	13.8	13.2	13.4	10.3
	조사망률	6.1	5.8	5.4	5.3	5.3	5.2	5.2	5.1
	인구자연증가율	16.6	9.6	11	10	8.5	8	8.2	5.2

C. 남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성비 비교

(단위: %)

	북한		한국	
	1993	2002	1993	2002
0-14세	27.9	26.5	24.3	20.4
15-65세	66.5	69.5	70.2	71.6
65세 이상	5.6	4	5.5	9
계	100	100	100	100

출처: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DPRK (200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인구문제연구소 (2004), Eberstadt & Banister (1992), 한국통계청 통계 데이터 베이스

표 3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1993~2000)

(단위: 천명, %)

A. 한국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계
1993	2,841 (14.7)	4,735 (24.5)	11,751 (60.8)	19,328 (100.0)
1995	2,534 (12.4)	4,822 (23.6)	13,076 (64.0)	20,432 (100.0)
2000	2,296 (10.9)	4,254 (20.2)	14,511 (68.9)	21,061 (100.0)

B. 북한

	농업	공업	건설, 토목	교통, 통신	상업, 수매	교육, 문화, 보건	토지 및 도시행정	기타	계
1993	3,381 (30.7)	4,118 (37.4)	464 (4.2)	402 (3.7)	508 (4.6)	843 (7.7)	250 (2.3)	1,034 (9.4)	11,004 (100.0)
1995	3,454	4,284	460	415	514	863	258	-	-
1999	3,567	4,410	482	434	529	886	265	-	-

출처: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DPRK (2002), 한국통계청 통계 DB

2. 부정적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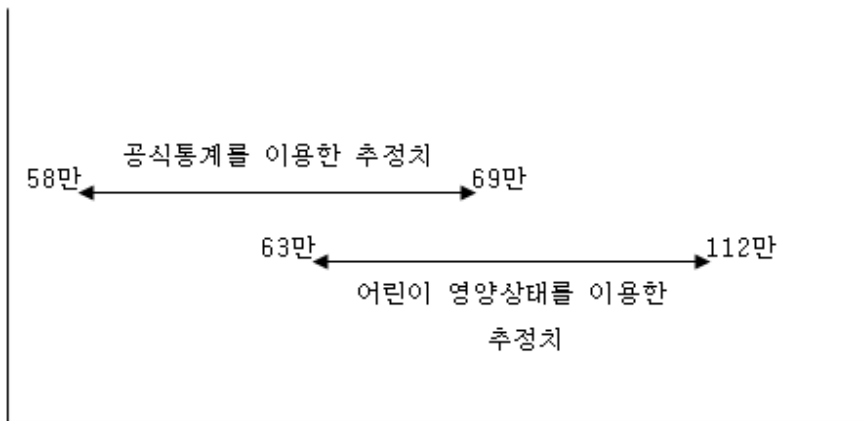
그런데 이처럼 낙관적인 견해와는 정반대로 통일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일 후 한국경제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는 일도 가능하다. 통일 이후 일정 기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간 동안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대규모일지도 모르는 반면, 통일에 따른 편익은 적어도 일정 기간 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서와는 정반대로 통일은 한국경제에 인구학적 재앙 또는 노동력의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외견상으로 보면 남북한의 인구구조는 가용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족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인구 또는 노동력이 과연 정상적’ 인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왔으며,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릴 정도의 인구학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시기를 거쳐 온 유아 세대는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청소년 세대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을 것이며, 장년 세대의 경우 식량을 찾아 직장을 이탈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도와 (조직)규율에 대한 적응능력 역시 거의 와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 남북 경협을 통해 이들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몰라도, 통일 이후 한국경제가 이들을 전면적으로 포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차치하고, 그 편익은 사실상 단기간 안에는 거의 전무 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림 4 ■ 1994~2000년 북한 인구손실 규모 추정



출처: 이석 (2004)

표 4 | 영양실조 상태의 북한 어린이 비중(1997~2004)

(단위: %)

	1998	2000	2002	2004	cf. 1997
만성영양장애	62.3	45.2	38.8	35.9	38.2
급성영양장애	15.6	10.4	8.3	7.5	16.5
저체중	60.6	27.9	20	23.3	

출처: Katona-Apte & Mokdad (1998), WFP(1998),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2; 2005)

동일한 이유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역시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해외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산업은 대부분 경쟁력을 상실한 기초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일 이전 남북경협 등을 통해 국민경제 공간 밖의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국민경제 공간 안에 존속시킨다는 것은 전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 전반의 비용구조를 생각해 볼 때 이처럼 국민경제 공간 안에 존속하는 기초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각종 지원책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산업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을 매개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중화시킨다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편익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 비용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한국)시장경제로의 편입 비용 역시 예상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존재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의 활동과는 그 본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위배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질서가 사회주의적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위 형식 자체가 시장경제로 진입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과거 동유럽 경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왕성했던 국가일수록 시장경제에 들어서도 공식적인 제도를 회피하는 경제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장경제의 발전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한국의 시장경제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은, 과거 북한에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욱 쉽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IV. 통일의 경제적 문제와 남북경협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의 남북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경우에 따라 매우 심각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개념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정부가 남북한 사이의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점진적 패러다임은 정치적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는 현실화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점진적 패러다임을, 통일 이후에는 몰라도, 통일 이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남북경협이라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통일 이전 남북경협과 통일 이후 경제통합

남북경협이 앞서 언급한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남북경협은 통일 이전 북한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역시 통일 이전과 이후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이른바 점진적 통합 패러다임을 현실로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점진적 패러다임의 실현이 가능해지는 기본적 이유는 남북경협이 정치적 통일 이전에 실행된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단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국의 경제적 행위는 통일 한국의 일부를 구성하는 북한(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정치적 통일 이전 한국이 별개의 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것의 규모와 속도, 진행 방향 등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의사에 의해 결정 가능하다. 통일 이전의 남북경협이 통일 이후의 통일 비용과 편익의 발생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그 스스로가 적절히 남북경협을 조절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비용 편익 발생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은 위의 **그림 2**의 시민 A로 하여금 실제적인 남북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통합을 주도해야 할 사람 A로 하여금 통합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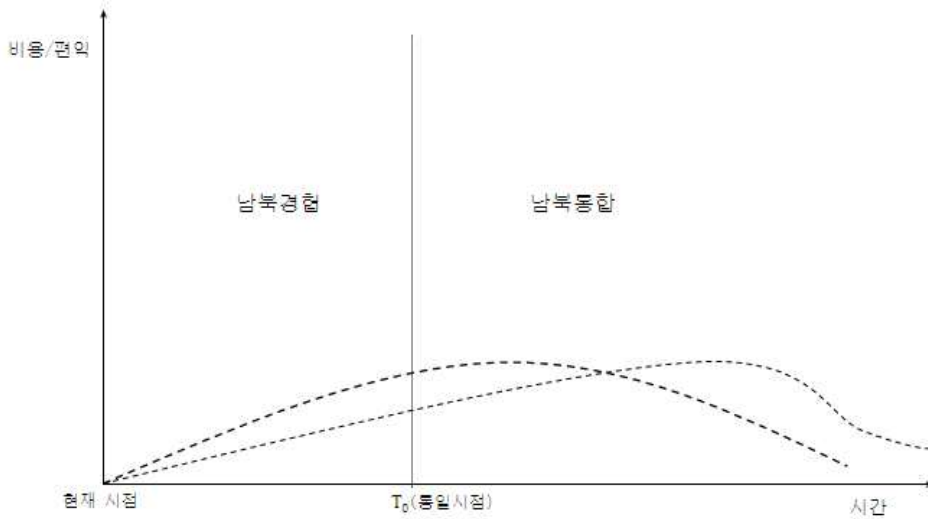
2. 남북경협에 영향력 메카니즘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남북경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기능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비용과 편익의 기간별 재배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까?

개념적으로 남북경협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통합에 따른 한국의 대북투자과 증가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통일 이전 스스로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 북한지역에 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협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수행하는 동일한 사업과 증가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 수행되는 남북경협은 통일 이후 한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대북투자를 미리 수행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소득은 당연히 증대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의미하므로 응당 그 수혜국인 북한의 소득증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소모성 비용이며, 이는 통일 시점에서의 북한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통일 이전의 남북경협은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의 대북투자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시점에서의 북한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한국의 비용지출을 경감시킨다. 결국, 1) 한국이 본격적인 통합 이전 남북경협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행할 것인가, 2) 이 기간 동안 남북경협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선택함에 따라, 3) 통일후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전체 기간별 비용지출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남북경협은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편익의 스케줄 또한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통일에 따른 인구학적 또는 노동력의 편익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는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경협의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 한국이 얼마든 향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연히 통일 이후 그 편익의 발생 스케줄 또한 기간별로 통제 가능하다. 이는 통일에 따른 비경제적 편익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실제로 통일로 인한 비경제적 편익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종식과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같은 정치적 편익 역시,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림 5 | 통일 이전 남북경협과 통일 이후 남북경제 통합



한편, 남북경협은 통일을 성사시켜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를 통일에 우호적이게끔 만드는 경제적 수단이다. 통일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앞서의 한국 사람 A의 태도를 통일에 보다 긍정적이게끔 바꾸어 놓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채널로부터 발생한다.

첫째는 남북통합에 따른 일종의 긍정적 자산 충격 기대 효과이다. 남북경협은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의미하므로, 이는 한국의 경제주체에 의한 북한자산의 취득과 사실상 동의어이다. 이러한 자산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토지이용권과 같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권리일수도 있으며, 금강산이나 북한지역의 광산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제개발권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통일이 실현되어 북한지역이 한국경제에 편입되는 경우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통일 이전 남북경협이 진행될수록 한국의 경제주체가 보유한 이러한 북한 자산의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증대할수록 앞서 언급한 한국사람 A는 통일에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변모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이전 남북경협이 진행될수록 통일 이후 한국이 지불하는 통일비용이 줄어들고, 이의 한국으로의 (재)환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한국이 북한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응당 이러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주민이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다시 한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환류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소비체제와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한국으로의 비용 재환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된 보조금을 통해 한국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보다는 이미 그 사용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북한의 소비패턴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한국이 지출한 비용이 중국이나 여타의 주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 남북경협은 바로 이러한 비용의 누출을 방지하고, 이의 한국으로의 재환류를 촉진하는 경제적 채널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기업 및 주민의 소비와 생산활동 패턴이 한국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유통망과 상품분배 채널이 북한지역에 더욱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 이전 남북경협이 진행될수록 향후 한국이 지불하는 통일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 비용 자체가 한국으로 매우 잘 빠르게 재환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응당 앞서 언급한 한국 사람 A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의 전제조건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 이전의 남북경협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우회하여 통일 이후의 점진적 통합패러다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경협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통일 이전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담당주체가 한국에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또한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남북경협은 그 의의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만일 통일 이전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경제주체가 시장경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들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자. 이에 따라 그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북한의 특정기업에 투자를 요구하고, 한국 역시 단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자.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향후 통일 이후 한국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기는 커녕 아마도 이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남북경제통합은 결국 북한의 현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간 사회주의적으로 운영되던 이 기업은 새로운 시장질서에 적응하기는 보다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 기업이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에서 강고하면 할수록, 이의 청산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언급한 남북 경협을 통한 통일비용의 경감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이를 통한 통일비용의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면, 향후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상적인 통일 방식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통일 이전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부 또는 주체들이 한국과 시장경제에 우호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2) 한국과 시장경제에 우호적인 북한의 정부 또는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크기와 속도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통일비용과 편익의 발생 스케줄을 기간별로 충분히 분산한다. 3) 이처럼 통제된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이에 대한 경제적 거부감이 사라지는 경우, 이의 현실적 실행을 추진한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진정한 경제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남북경협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로부터 야기되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통합과는 그 궤를 전혀 달리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통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남북한 경제를 통일이라는 정치적 당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단 정치적 통일이 성사되면, 한국경제는 통일비용의 부담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그런데 이러한 비용부담의 문제는 단순히 통일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1) 통일 이후 발생하는 통일비용과 편익의 스케줄이 서

로 다르며, 2)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서로 차이가 나고, 3) 이와 관련된 각 경제 주체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한국에서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통일세대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바로 이것이 통일의 경제적 문제이다.

셋째, 통일의 경제적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달성하려는 급진적 통합 패러다임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한국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비용 지출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전반적 통일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골고루 분배하게 만드는 이른바 점진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점진적 패러다임은, 일단 남북간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통일 이후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과 편익을 실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만일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부 또는 주체가 한국에 부정적이거나 시장경제에 친화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형식의 남북경협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 이후의 비용지출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향후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도, 현재의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정부 또는 그 밖의 여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한국과 시장경제에 보다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1996.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통일연구원, 200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보고서”, 2004.
-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2002.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DPRK, 1995.
- _____.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November 2002.
- _____. Statistics,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WFP & UNICEF, May 2005.
-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 Eberstadt, N and Bannister J.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
- Katona-Apte & Mokdad, Malnutrition of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Journal of Nutrition Vol. 128 No. 8 August 1998.
-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h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
- World Food Program.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November 1998.